

광주, 영산강·황룡강 하천정비사업, 전국 「大賞」수상

광주시의 '영산강·황룡강 하천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한다.

지난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주최하는 '제2회 친환경 하천정비 공모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한강과 울산의 태화강, 대전의 남한강 정비사업 등 전국에서 10개 지역의 하천정비사업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광주시의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이 가장 자연친화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주시에 대상을 받게 된 데는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가들에게 실농 보상을 실시하여 일체 경작을 금지시키고 각종 오염유발 시설물을 전면 정비함으로써 자연식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정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영산강·황룡강 하천정비사업은 1단계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공사를 하고, 2단계로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가꾸는 사업이다.

1단계 치수대책사업은 퇴적으로 좁아진 하천 유수단면을 확대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010억원 투입하여 하천구조와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현재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단계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치수대책사업으로 하도준설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 5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환경 보전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 자연적인 하천 수변식

물인 다년생 초본류 조성과 일부 지역에 친수공간, 자연학습원, 인공습지,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여 하천의 생명과 문화를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담양군계에서 나주시계에 이르는 40km 구간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태하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수도 광주의 명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안천 등 8개 하천 테마생태 하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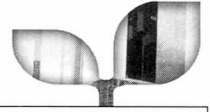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매년 1,700억원을 투입해 훼손된 하천을 살아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지방하천 3,010km 가운데 20%인 600km가 콘크리트 등 인공설치물이 훼손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팔당수계 상수원인 경안천 등 8개 하천에 대해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을 복원하고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조성 등 생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하천유형별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용인 경안천 등 상수취수원 상류지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차단과 용수확보, 생태환경 차단시설 철거 등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 서호천, 의정부 중량천 등 도심지 오염하천의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고수호안 및 하상을 활용한 소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



적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산의 화성천은 공단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오염도가 심한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자연정화시설인 접촉산화처리시설, 인공습지 등을 설치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천유형별 정화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이용중인 하상내 콘크리트 구조물 주차장 철거, 오염하천내 퇴적물 준설, 하도습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 여울, 소 설치 등 자연친화형 하천환경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선형을 따라 물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제방과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다양한 조류서식처, 어류서식처, 소생물 서식처 등 생태적기반조성을 위해 갈대와 습지수목의 숲을 조성하고 거석 호안 조성으로 산란·서식이 용이한 공간을 마련하고 수중보를 개선해 어도를 설치, 어류서식처도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안천, 탄천, 중랑천 등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정비되면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점·비점 오염원의 생태적 처리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면서 “생태복원, 환경교육, 친수공간 등을 제공해 살아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세계일류 친환경 물순환 모범 도시로 조성!

서울시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일류 친환경 물

순환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천연자원인 빗물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화로 인한 콘크리트 포장 등 불투수면(不透水面) 증가로 빗물의 토양 침투량이 감소하여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도시 열섬화, 홍수 시 침수피해 등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보다 많은 빗물을 토양에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침투통, 투수성 보도 등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미래의 수자원인 지하수함양 증대, 하천유량 복원, 호우 시 수해방지, 도시열섬화현상 완화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물, 공원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토록 하며, 계곡 및 상습침수 저지대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호우 시 수해를 경감시키는 등의 효과적인 빗물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모든 공공사업에 빗물관련 시설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빗물관련 시설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뉴타운 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로건설, 공원조성, 문화체육시설물 건립 등 공공사업 추진 시 빗물침투·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분야의 각종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을 통하여 빗물침투·이용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물, 주택 등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면 필요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시민이 대지면적 2천㎡(약 600평)이고 건축연면적 3천㎡(약 900평) 이하 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빗물관리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빗물관리 10개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치현장에서 활용할 지침인 '빗물관리 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빗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 22일 제15회 '세계 물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 건축, 도시관리, 토목, 조정 등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빗물침투시설, 이용시설 제품과 설치사례 등을 홍보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울산시, 갈수기 하천 수질관리 적극 추진

갈수기 하천 수질관리 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울산시는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하상준설, 오수차단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도심하천 중 전국최고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갈수기 수질오염 및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갈수기 하천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태화강 및 주요하천 주변 폐수 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방류수기준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장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하천 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차집 관거에 대하여 파손, 이탈, 하천수 유입법람 실태 등을 조사하여, 사전에 관로보수와 준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천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하천 수질오염행위 및 오수유입 여

부를 수시 확인하기 위하여, 시, 구·군 하천 점검반을 편성, 매일 상시 운영할 방침이며, 휴일에도 태화강을 중심으로 지천까지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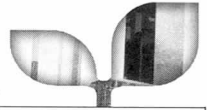
남구 삼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1일 5,000m³ 규모의 오염물질처리시설을 오는 3월에 착공하고, 동구 및 북구 염포 양정일원에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123km 하수관정비사업을 5월에 사업자를 선정, 10월에 착공하며, 회야강 지천의 온양 웅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지선관거 40km를 올해도 계속 부설할 방침이다.

또한 농소, 삼남지역 일원 지선관거 60km를 부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3월에 용역 할 계획에 있으며, 회야담 상류지역인 웅상지역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지선관거 10.9km 설치를 위해 3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삼산, 달, 학성, 옥교동 등에 매설된 하수관이 오래되어 파손, 압착된 33km를 지난 2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오는 3월부터는 신정, 반구동 지역 14.4km에 대해서도 하수관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하수관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태화강은 물론 지천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갈수기에는 하천 수량이 부족하여 조금이라도 오염물이 유입될 경우 오염부하량은 대폭 증가되어 지금까지 열의를 가지고 수질개선에 매진한 보람이 사라질 수가 있으므로, 갈수기에 수질관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추진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고품질 수돗물 욕구에 부응하고,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코자 도의원,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질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체 부담경감 방안에 대한 정확한 선행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낙동강 수계 상수원수에 미치는 미량 유해물질 발견·대처 과정의 새로운 모델 정립과 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지방상수도 누수로 인한 대처 방안과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 장애 극복과 댐 상류 지역 등 규제 지역 주민 지원 방안이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런던 협약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슬러지 저감 방안 등 물관리 시책 전반에 대한 여러 현안 문제들이 중앙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올해 수질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상수원 수 공급과 수돗물 불신 해소 등 수질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환경 자율점검업소 확대

청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사업자가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토록 하기 위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자율점검업소 제도는 사업자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의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의해 지정요건 및 자율관리 능력등을 감안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며 이때 자율점검업소 지정서가 교부된다.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총 17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지정요건은 최근 3년 이상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청색사업장과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 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업소는 제외된다.

청주시 환경지도담당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해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으로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배출업소가 확대될 경우 여유인력을 취약업소에 집중 지도·점검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애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02-852-2291(편집국)